

“축산물가격안정법을 제정하라”

— 한국축산경영학회,
관계당국에 10개항의 건의문 제출 —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류제창)는 지난 7월 7일 정부의 쇠고기 수입방침과 관련, 이에 대한 영향을 극소화하고 축산의 적정소득 보장과 국내 축산의 보호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안 10개항을 마련,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대 결의대회는 85년도의 소값 하락의 주요원인이 정부의 무모한 쇠고기 수입에 있었던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축산물의 적정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축산정책의 수립없이 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국축산경영학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우선 큰 소 및 송아지의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안정대를 확정할 것 ▷ 정부와 13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축산물가격안정법」을 제정하여 소·돼지·닭·계란·우유 등의 적정가격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국내 축산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배합사료 원료와 축산기자재의 도입시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세와 유통사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시킬 것 ▷ 현행 쇠고기·돼지고기의 축산물 연동가격제를 철폐하고 부위별·등급별 차등가격제에 의한 가격 자유화를 실시할 것 ▷ 정부와 국회는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돼지고기와 같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축산물부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축산물 수출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대미 통상 무역상 부득이한 쇠고기의 수입이라면 대안의 하나로 수입된 쇠고기를 전량 즉시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시킬 것 ▷ 만약에 쇠고기의 수입이 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의 수입주체는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적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축산생산자 단체로 일원화 할 것 ▷ 정부는 국제경쟁시대에 직면한 축산경영자들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는 타월한 경영능력을 구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영자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 차제에 정부는 축산물 수급균형과 축산소득의 증대를 통한 복지농촌의 건설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축산물 생산정책을 비롯한 축산물 유통소비, 구조분배, 가격, 재정, 금융, 관세정책을 재정비 할 것 ▷ 정부는 동물성 식량을 생산공급하는 축산인을 애국하는 국민임을 생각하고 생존권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며 농민을 존경하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 등 10개항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한국축산경영학회가 6월 11일 서울우유 대강당에서 개최한 「축산물 수입개방과 한국축산의 대응방안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김동성)